http://dx.doi.org/10.5392/JKCA.2016.16.02.231

중·고령층 고용변화 추이와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

Labor Transi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and the Effects of Perceived Job Stability on Poverty Exit

강성호* 조준용**
보험연구원*,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ung-Ho Kang(ksh0515@kiri.or.kr)*, Joon-Yong Jo(joyhallym@hallym.ac.kr)**

요약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중·고령층 | 고용변화 | 고용안정성 | 탈빈곤 |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labor transi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in Korea utiliz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Then it estimates the effects of perceived job stability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on poverty exit based on the age group simulation. The outcomes suggest that mid-50s and over are highly vulnerable to early retirement and they suffer from unstable employment and low possibility of re-employment. The logit analysis that simulates the effects of perceived job stability on poverty exit shows that mid-50s are more likely to get off the poverty than 65 and over when they have stable jobs. These implies that labor market policies should be designed in a tailor-made manner in consideration of the age group and i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progressive labor policy measures that extends retirement age, that provides with job opportunities to middle-age and elderly, and that links employment and welfare under the umbrella of income security plan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 keyword : | Middle-aged and Elderly | Labor Transition | Job Stability | Poverty Exit |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

*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학회 2015년 동계학술세미나「교육개혁, 인적 자본과 경제혁신정책 방향-교육과 창조경제 혁신 어떻게 가야 하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접수일자 : 2015년 12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29일
수정일자 : 2015년 12월 29일 교신저자 : 조준용, e-mail : joyhallym@hallym.ac.kr

I. 서 론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안전망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위기이후의 경기침체는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의 확대, 기업의 고용창출 저하, 청년층 실업 증가, 중·고령층의 고용불안(조기퇴직) 등과 같이 질적으로 악화되는 고용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실업과 맞물리게 되면, 잠재적인 취약계층을 양산하여 큰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보고에 의하면, 시장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을 5% 내외로 하고 장기실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실업자 중 약 110만 명 정도가 사회안전망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된다고 한다. 또한 비록 경기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향후 2~3년 동안은 장기·고실업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우울한 노동의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36].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율을 비교해 보면, 20대의 고용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57.4%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의 고용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60-64세의 고용율이 58.3%에 달해 처음으로 20대의 고용율을 앞지르고 있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고용율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31.3%에 달하고 있다[38]. 이처럼 통계 수치만 보면, 최근 큰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에 비해 고령층 고용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3D업종 등과 같은 비선호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청년층의 속성과, 생계를 위해서라면 어떤 업종도 마다하지 않는 고령층 집단 간 특성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9]. 특히 고령층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26],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있는데[17], 이는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고령층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결과 고령자의 61%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38], 소위 '반퇴(半退)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령층의 고용율 증가 뒤에는 질적으로 낮은 고용수준과 양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일자리[1][16]로 인한 불안한 노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1)]

한편,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구조의 확대와 저성장의 지속은 향후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2009년 9.6%수준에서 2060년에는 29%수준으로 급증하여 현재 OECD 평균인 22.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2].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 생산 요소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은 현재 3%수준에서 2030년 이후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2]. 더 나아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구조에서는 갈수록 중·고령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가를 요구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동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고용과 복지에 모두 초점을 두어, 이들의 고용형태 특성 및 고용변화 특성을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중·고령층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고령층의 고용형태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분석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1][9][16], 이러한 연구들은 중·고령층의 '고용'에 초점을 둔 정적인 기술을 하고 있음에 반해, 이를 노후소득보장과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중·고령층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중·고령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탈빈곤과 연결시켜 분석해보는 시도는 더욱 시의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선행연구(제2장) 고찰을 거쳐, 중·고령층의

1) 최근 들어 다수의 뉴스미디어에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며, 노인 일자리의 양과 질의 확보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37][39].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가 청년층의 일자리 빼앗기라는 비판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은정(2012)은 중·고령자 고용이 청년고용과 대체관계가 아님을 밝히기도 하였다.

불안정적인 고용형태 특성을 조기퇴직 현황과 소득수준(제3장)을 통해 살펴본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1차-4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층의 직장이동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 및 임금변화를 동적으로 살펴보고(제4장), 이어서 로짓분석을 활용한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한다(제5장).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2]로의 성공적인 이행의 관점에서, 중·고령층의 고용 및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제6장).

II. 선행연구 검토

1. 중 · 고령층 고용현황 및 고용변화 특성에 대한 연구

최근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고용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취업구조나 일자리 특성을 기술적으로 다루거나, 취업/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성균(2009)이나 권혜자(2011)는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일자리특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은 중·고령층의 전반적인 질 낮은 고용현황을 살펴보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성균(2009)은 중·고령층 중에서도 저학력 여성 배우자 집단이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보여주고, 이들에게는 단순한 일자리의 확대뿐이 아니라 적절하고 안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괜찮은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에 비해 신현구(2008)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사용하여,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근로생애 특성을 직업력 중심으로 동적인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들은 평균 21세에 첫 일자리를 시작하여 3.3개의 일자리에서 약 30년 동안 일을 했으며, 60세가 넘어서는 자영업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고령층의 고용현황이나 직업력 분석 연구들은 '고용' 현상의 기술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보니, 이를 실질적인 탈빈곤 효과와 연계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중·고령층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인적자본이나 인구학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을 활용하여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박경숙(2003)은 과거 종사상 지위, 소득, 수혜보험 수혜여부 등이 고령자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성지미·안주엽(2006)은 연령, 고학력, 금융자산 등이 중·고령자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한편, 건강은 고령자의 취업확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송일호·박명호(2012)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별도로 분석하여 고령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연금이나 사회보장이 은퇴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다수의 연구들은, 공적 이전소득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3][15][18][33][34]. 하지만 이러한 중·고령층의 취업/은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역시 고용안정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에 대한 관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노인들의 소득원에 대한 연구

한편, 최근 들어 노인들의 소득구성과 빈곤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주로 노인 소득원의 구성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밝히고 있다. 정경희(2009)는 한국 노인의 소득 및 빈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대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노인들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도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아,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준제고와 노동시장 정책 등의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순아(2015)는 LIS (Luxembourg Income Study)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

2) 201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은 12.7%로서 이미 고령화사회(7%-14%)이며, 향후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1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로 비교국가들 중 가장 높고, 이전소득은 48.6%로 가장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연금체계 정비, 보편적 수당, 기초연금, 공공부조 등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노후준비를 위해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를 주장하는 연구에서도 나타난다[20].[3] 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중·고령층의 고용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노인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고용안정이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어,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이 갖는 효과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3. 고용안정성 및 중 · 고령층의 탈빈곤에 대한 연구

고용안정성(job stability)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속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일자리 유지 기간(고용유지기간)이나 근속비율(고용유지율)에 관심을 두고 있다[19][24]. 실제 이러한 개념으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 수준은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 숙련도 별로 차이가 있으며,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생산직 보다는 전문 사무직일수록,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일수록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하지만 장기간 고용이 유지되었다거나 근속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근로자의 일자리가 안전하다거나 혹은 일자리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ousa-Poza(2004)에 의하면, 오히려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 과거 노동시장의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하는데, 이 경우 주로 향후 자신의 노동시장에서의 위험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19] p.114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 근속기간, 고용유지율, 종사상의 지위나 일자리의 질과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혼용하기보다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을 측정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신의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인지를 묻는 문항을 고용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한다.

끝으로 중·고령층의 빈곤 혹은 탈빈곤 이행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연령이나 건강, 학력, 혼인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이나[6][13][30],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특성[13], 과거의 직업력이나 종사상의 지위와 같은 노동시장 변수들을 주된 설명변수로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6][30]. 이러한 연구들은 성, 연령, 소득, 자산, 종사상 지위 등의 변수를 탈빈곤 확률을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안정을 탈빈곤과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노후 '이전소득' 보다 '고용'을 통한 복지에 초점을 두고, 중·고령층의 조기퇴직 현황과 고용형태 특성 및 고용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기존 선행 연구들이 중·고령층을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보고 고용변화에 대한 정적인 기술을 하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연령대를 구분하고 고용변화를 구분된 연령대 별로 추적하는 동적인 기술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촉진법」 및 일본의「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의 구분을 참조하여, 중·고령층을 45세-54세, 55세-64세, 65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4]. 이후 기존 연구들에서는 간과되었던 고용안정성 자체가 갖는 노후소득보장 특성에 초점을 두어, 중·고령층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에도 역시 중·고령층의 연령 구분을 적용하여, 향후 고용안정 노동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령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3)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구들 중에는 노후준비 교육이나 개별 성격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와 같은 준비성향에 대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12][32].

4)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인자를 고령자로 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는 45세 이상을 중고연령자, 65세 이상을 고연령자로 구분하고 있다[21].

Ⅲ. 중 · 고령층 고용/퇴직 특성 및 소득수준

1. 중 · 고령층 고용/퇴직 현황 및 특성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5년 10월 현재 50~59세 인구의 고용율은 74.9%(전체 60.9%)여서 통계적으로만 보면 다른 연령층(20대 58.4%, 30대 73.2%, 40대 80.1%)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은 50대 중반이 되면 고용율이 급격치 추락하기 시작하고, 65세가 되면 32.3% 가 되어, 매우 심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55~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의 평균근속기간은 살펴본 결과,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9.4개월(2015년 5월 기준)으로 나타나, 2006년 17년 3.1개월과 비교하면 2년 5.7개월 줄어든 것이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와 대체성 논란, 명퇴 등으로 인해 조기퇴직이라는 고용특성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기퇴직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년제 실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규정상 평균 정년연령이 57.6세로 추정되나, 노동현장에서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이보다 3~4세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이후 제2의 근로생애기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예상된다[2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제2의 근로기간 동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된 일자리로 부터의 조기퇴직은 취약한 노후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 1]에 나타난 직장이동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젊은 층의 경우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형태(정규직)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으나, 중·고령층,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우 직장 이동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정규직으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퇴직 후의 일자리에서는 연령 및 종사상 지위에 따라 직업편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혜자(2011)에 따르면, 중·고령층의 제2기의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연령일수록 청소 및 경비 관련직(65-74세의 62.6%)으로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반면, 고용주의 경우에는 상점판매직,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관련직(65-74세의 62.5%) 및 상품판매직과 음식조리직 등으로의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고령자의 퇴직 후 일자리 편중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서 청소, 경비, 소규모 판매업, 그리고 요식업 등의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정년 이전의 조기퇴직이 노후소득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직장 이동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1998~2007: %)

이전 직장 고용형태		새 직장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30대	정규직	63.9	16.6	19.5
	비정규직	34.2	45.3	20.5
40대	정규직	51.8	19.9	28.3
	비정규직	25.2	56.9	17.9
50대	정규직	50.4	27.7	21.9
	비정규직	20.2	67.6	12.2
60대	정규직	46.6	37.2	16.2
	비정규직	14.2	75.5	10.3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금재호(2011)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55~79세의 중·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0%(722만4천명)로 나타났으며,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연령은 평균 72세로 나타나서, 중·고령층 인구의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31].

2. 중 · 고령층의 소득수준

중·고령층의 조기퇴직 경향과 열악한 재취업 환경은 이들의 연령대별 급여 수준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연령대별 월평균 급여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40대 후반에 임금피크를 경험하고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38]. 정규근로자의 연

령대별 월급여액을 살펴보면, 40대에 정점(303만원)에 다다른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293만원, 60대 229만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구조가 연공성을 띠지만, 근속연수가 짧고, 또한 4, 50대에 재취업할 경우 임금조정을 경험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장이동을 경험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3, 40대의 직장 이동은 각각 13.0만원, 3.9만원의 임금 증가를 가져온 반면, 5, 60대는 각각 3.1만원, 4.4만원의 임금 감소를 경험하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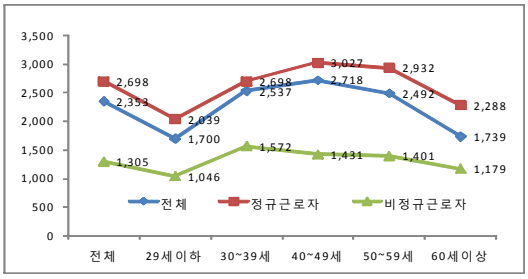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월평균 급여액 (2014년 기준: 천원)

그러나 이처럼 중·고령층이 겪고 있는 조기퇴직이나 재취업에서의 고용불안, 그리고 임금감소가 초래할 노후소득의 위협에 대해, 실제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된 연금의 수급 현황은 그리 높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0%(532만8천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9만원이었다[31]. 201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17,281원임을 생각하면, 연금에 의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임금특성, 그리고 연금 수령 현황은 조기퇴직, 불안정한 재취업, 미흡한 노후소득이라는 점에서 취약한 중·고령층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고령층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은, 불충분한 연금 수급액을 고려할 때 곧 노인빈곤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령층의 고용 및 임금 변화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기술분석을 넘어, 생애주기와 관련된 종단적 시각으로 고용변화와 임금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IV. 중 · 고령층 고용변화 및 임금변화 특성

이 장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1차~4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 주된 일자리 취업형태, 고용형태의 변화 및 임금 변화를 분석한다. 고령화연구패널은 2006년 전국 45세 이상 중·고령자 약 1만 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중·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사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자의 고용과 관련된 항목이 다른 조사들에 비해 특화되어 있어, 본 연구의 사용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중 · 고령층 고용변화 특성

먼저 분석대상 수의 변화를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표 2], 1차 조사(2006년) 당시의 분석대상이 6년이 경과한 4차 조사(2012년)에서는 71.1%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 1차 조사에 비해 4차 조사에서는 73.0%로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21.5%로, 비경활자는 71.7%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단순 횡단분석에 따른 빈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감소하는 만큼 사망하거나 조사에서 탈락된 것을 의미한다.

표 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명, %)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취업	4,634 (100)	4,298 (92.8)	3,816 (82.3)	3,382 (73.0)
실업	236 (100)	102 (43.2)	71 (29.9)	51 (21.5)
비경활	5,384 (100)	4,288 (79.6)	3,830 (71.1)	3,862 (71.7)
전체	10,254 (100)	8,688 (84.7)	7,716 (75.3)	7,294 (71.1)

[표 3]은 중·고령자 개인별 종단적 경제활동 상태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차 조사기간 때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로 분류된 중·고령층이 2차~4차 기간 동안 경제활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취업자의 경우는 첫 조사 후 2년경과 시점에서 87.1%가 취업자로 남아있고 약 12.9%가 실업과 비경활자로 전환되었으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81.3%가 취업자로 남아있고 약 18.7%가 실업과 비경활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6년이 경과한 후에는 74.2%가 취업자로 남아있고 약 25.8%가 실업과 비경활자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자의 경우는 첫 조사 후 2년경과 시점에서 46.9%가 취업자로 전환되었고 실업자로 남아있는 비율은 5.6%, 비경활자로 전환된 비율은 47.5%였으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42.0%가 취업자로 전환되었고 실업자로 남아있는 비율은 5.3%, 비경활자로 전환된 비율은 52.7%였다. 그리고, 6년이 경과한 후에는 41.2%가 취업자로 전환되었고 실업자로 남아있는 비율은 2.4%, 비경활자로 전환된 비율은 56.4%였다. 실업자였던 중·고령층이 취업자와 비경활자로 활발히 전환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령으로 인해 취업자 보다 비경활자로 전환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활자의 경우는 첫 조사 후 2년경과 시점에서 12.6%가 취업자로, 0.8%는 실업자로 전환되었으며, 비경활자로 남아 있는 비율은 86.6%였다. 4년이 경과한 후에는 16.2%가 취업자로, 0.5%는 실업자로 전환되었으며, 비경활자로 남아 있는 비율은 83.3%였다. 그리고, 6년이 경과한 후에는 14.5%가 취업자로, 0.3%는 실업자로 전환되었으며, 비경활자로 남아 있는 비율은 85.2%로 나타나, 비경활자였던 중·고령층은 일부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비경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1차 -〉 2~4차 : 명, %)

1차조사 \ 2~4차조사	기간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자 (평균 55.6세)	2년간 변화	87.1	1.2	11.7
	4년간 변화	81.3	1.2	17.5
	6년간 변화	74.2	0.9	24.9
실업자 (평균 57.0세)	2년간 변화	46.9	5.6	47.5
	4년간 변화	42.0	5.3	52.7
	6년간 변화	41.2	2.4	56.4
비경활자 (평균 65.7세)	2년간 변화	12.6	0.8	86.6
	4년간 변화	16.2	0.5	83.3
	6년간 변화	14.5	0.3	85.2

[표 4]는 중·고령층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형태(종사상지위) 변화를 1차 조사와 4차 조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1차 조사에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은 각각 71.5%, 11.2%, 17.3%로 조사되었으나, 6년이 지난 4차 조사에서는 각각 62.8%, 15.8%, 21.4%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횡단분석을 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자들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고령층의 상용직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4. 고용형태의 횡단면적 변화 (임금근로자 : 명, %, 세)

구분	1차 조사(2005)			4차 조사(2011)		
	빈도	비율	연령	빈도	비율	연령
상용직	1,659	71.5	51.8	1,478	62.8	57.3
임시직	259	11.2	54.6	372	15.8	59.7
일용직	401	17.3	54.2	503	21.4	59.5
합계	2,320	100.0	52.5	2,353	100.0	58.1

2. 고령화 진행과 고용안정성, 그리고 임금의 변화

여기서는 중·고령층을 1차 조사(2006년)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2, 3, 4차 조사로 이어지는 고령화 진행과정에서,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의 변화를 분석한다. [표 5]는 중·고령층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주관적인 응답을 한 것에 대한 각 차수별 조사의 기술통계이다.

표 5. 연도별 현재 일자리의 안정성 (명, %)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매우 그렇다	146 (7.3)	104 (5.1)	67 (3.7)	51 (3.2)
그런 편이다	1,004 (49.9)	1,068 (52.2)	934 (51.8)	898 (5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703 (34.9)	706 (34.5)	651 (36.1)	570 (35.2)
전혀 그렇지 않다	160 (7.9)	168 (8.2)	152 (8.4)	98 (6.1)
합계	2,013 (100)	2,047 (100)	1,804 (100)	1,617 (100)

[표 6]은 중·고령층의 연령 구간별 고용안정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고령으로 갈수록 고용안정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불안정성은 45~54세에서 21.7%, 55~64세 28.8%, 65세 이상 36.8%였음에 반해 조사 기간 동안 모두(6년 이상) 고용안정기에 있었던 비율은 45~54세 15.0%, 55~64세 8.5%, 65세 이상 6.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중·고령층의 경우 고령화될수록 고용안정성에 취약한 계층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중고령 연령대별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변화 (명, %)

고용안정 정도 \ 연령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불안정 (4회 모두)	빈도	507	404	325	1236
	비율	(21.7)	(28.8)	(36.8)	(26.8)
고용안정기간 2년 이하 (1회)	빈도	639	410	209	1258
	비율	(27.4)	(29.2)	(23.7)	(27.2)
고용안정기간 2년~4년 (2회)	빈도	444	268	167	879
	비율	(19.0)	(19.1)	(18.9)	(19.0)
고용안정기간 4년~6년 (3회)	빈도	393	202	122	717
	비율	(16.9)	(14.4)	(13.8)	(15.5)
고용안정기간 6년이상 (4회모두)	빈도	349	119	60	528
	비율	(15.0)	(8.5)	(6.8)	(11.4)
전체	빈도	2332	1403	883	4618
	비율	100.	100.0	100.0	100.0

한편, 중·고령층의 경우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 감소함과 동시에 임금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1차 조사에서부터 최근 4차 조사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은 69.2%로 나타났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으로 한 월평균 임금(경상소득)은 1차 조사 때 184만원에서 4차 조사 때는 188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차 조사와 4차조사간에 약 6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6세 정도 증가하였다는 점, 임금이 물가 혹은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상소득이라는 점, 그리고 1차 조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의 30.8%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 경우 1차 조사와 비교하여 월평균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정하려면, 근로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의 소득을 0으로 보고 2~4차 소득을 재환산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2~4차 조사의 경우 소득이 각각 162만원, 140만원, 13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고령층의 고용불안정 증가와 근로소득의 감소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향후 노인빈곤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장에서는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가지는 탈빈곤 효과를 추정한다.

V. 중 · 고령층의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 추정

1. 분석 가정 및 방법

본 장에서는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중·고령층을 1차 조사 연령을 기준으로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55세부터 퇴직하는 경향이 있고, 65세는 고령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위의 연령 구간 간의 이질성이 큰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독립변수인 중·고령층 고용안정성은 단순한 종사상의 지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분석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임금근로자라 하여도 단순한 종사상의 지위가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고용안정성을 자신의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인지를 묻는 문항(나의 일자리는 안정적이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빈곤선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빈곤 방식(OECD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을 기본으로 하되,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직접 추정하지 않고 기존의 통계치를 활용한다.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추정은 일반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을 설정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의 활용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는 1차 조사당시 4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직접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발표한 2013년 65세 이상 노

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49.6%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4% 사이의 조정빈곤율 35%, 40%, 45% 세 가지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넷째, 종속변수는 빈곤여부로 하고 이항변수로 취급하며, 분석모형은 로짓 분석으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하였듯이 탈빈곤 결정요인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성, 연령, 소득, 순자산을 투입하였다.

2. 중 · 고령층 고용안정성 및 탈빈곤 효과

중·고령자의 탈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연령 및 연령자승(age, age2), 고용안정성(dlabsave), 소득(lnincom), 순자산(lnnasset), 성(desex) 을 투입하여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 빈곤선을 무엇으로 하던 간에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탈빈곤할 확률이 높아지고, 남성일수록 탈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연령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과 자산, (남)성의 경우는 다른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탈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안정성의 경우, 빈곤선 45%에서는 유의하게 고용이 안정될수록 탈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빈곤선 35%나 40% 수준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없었다. 이는 빈곤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이 이들의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빈곤선 35%나 40%에서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신 빈곤의 심도, 즉 빈곤갭(poverty gap)을 줄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가능하게 한다.

표 7. 중 · 고령층 탈빈곤 결정요인(로짓분석)

변수	빈곤선 35%		빈곤선 40%		빈곤선 45%	
	B	Exp(B)	B	Exp(B)	B	Exp(B)
age	-0.1597	0.8524	-0.1814	0.8341	-0.0955	0.9089
age2	0.0021	1.0021	0.0019	1.0019	0.0014	1.0014
dlabsave	-0.3460	0.7075	-0.0326	0.9679	-0.5111 ***	0.5998
lnincom	-5.4431 ***	0.0043	-5.7727 ***	0.0031	-6.1363 ***	0.0022
lnnasset	-2.0820 ***	0.1247	-1.9541 ***	0.1417	-2.2580 ***	0.1046
desex	-1.2611 ***	0.2833	-0.6735 ***	0.5099	-0.9029 ***	0.4054
wave	-0.5181 ***	0.5957	-0.3070 ***	0.7357	-0.3147 ***	0.7300
상수	35.9367 ***	4.0469E+16	38.9345 ***	8.1101E+17	41.9057 ***	1.5828E+18

주) 로짓계수는 독립변수 한단위의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Log Odds Ratio(OR) 의 변화로 해석되며, 계수가 양수(+)일 경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중·고령층 연령 구간별로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선 45%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탈빈곤 결정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모형과의 차이점은 연령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age2는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제외하였다. [표 8]에 따르면, 연령의 경우, 65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과 자산은 연령 구간에 관계없이 탈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의 경우 45-54세 이하와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일수록 탈빈곤 확률이 높게 나타나나, 55-64세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도가 없었다. 55세-64 사이에 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기는 대대적인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남성이라고 해도 빈곤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용안정성은 45세~54세 연령구간(유의성이 낮고 계수값도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음)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탈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55-64세의 경우 고용안정성의 계수값이(-1.2607)이 65세 이상의 계수값(-0.5842)보다 크게 나타나, 55-64세 연령대에서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에서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이후의 연령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중·고령층 연령대별 탈빈곤 결정요인(빈곤선 45% 기준)

변수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B	Exp(B)	B	Exp(B)	B	Exp(B)
age	0.0709	1.0735	-0.0169	0.9832	0.0809 ***	1.0843
dabsave	0.0265	1.0268	-1.2607 ***	0.2835	-0.5842 *	0.5576
lnincom	-7.9713 ***	0.0003	-5.7404 ***	0.0032	-6.3093 ***	0.0018
lnmasset	-2.2854 ***	0.1017	-1.9812 ***	0.1379	-2.8915 ***	0.0555
dsex	-0.9967 *	0.3691	-0.5209	0.5940	-0.9312 ***	0.3941
wave	-0.4422	0.6426	-0.1766	0.8381	-0.2407	0.7861
상수	44.6042 ***	2.3516E+20	37.7773 ***	2.5497E+17	42.0772 ***	1.8789E+19

VI.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도입된 지도 10년이 지났다. 국제보건기구(WHO, 2002)의 활력 있는 고령화 (Active Aging)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고령인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대상으로 본 시각의 전환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고용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고려한 사회복지 체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불안정적인 고용특성과 고용변화를 살펴보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고령층은 조기퇴직 현상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한 취업형태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층의 고용불안정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근로안정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고령층 고용안정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의 중·고령층에게 고용안정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령층의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기존 노동시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탈빈곤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에서[11], 향후 도래할 고령시대의 고용-복지 정책의 개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은퇴를 늦추기 위한 제반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년 60세 법정기준에 더하여 단계적인 정년연장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드러나듯 고용안정은 노후소득관점에서는 탈빈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 또는 폐지정책과 동반하여, 2007년부터는'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년연장 노력의무가 부과되는 기업에서도 사실상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수의 중·고령자에 대한 정년보장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조기퇴직을 강요받는 대다수의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넘어서 다수의 중·고령자 정책대안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자리가 공익적 활동을 통한 소득보전이라는 목표를 갖는다 해도, 참여자들은 근로자성을 띠게 되어, 사업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상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11]. 따라서 정책대안은 일자리 공급자에 대한 유인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고령자의 고용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역시 다양한 부처 간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대상자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대상자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상황에서, 중·고령층의 고용과 복지가 직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65세 기준의 정책대상 구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용안정의 탈빈곤 효과라는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보다 55세 전

후가 더 크다는 점은, 향후 중·고령층의 연령대 및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맞춤형 조합 개발과 적용이 필요로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가 시도한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빈곤선 탈피에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고용안정이 빈곤의 심도를 줄여주는 빈곤갭(poverty gap)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소득의 증대에 따라 빈곤갭 수준을 줄이는 것 역시 노후소득보장 효과라는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있기에, 향후 고용안정이 빈곤갭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권혜자,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11.

[2] 금재호,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제80권, pp.61-75, 2011.

[3] 김원섭, 우해봉, "국민연금이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35권, pp.111-139, 2008.

[4] 남상호, *가구균등화척도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5] 방하남, 어수봉, 이상민, 우규창, 하갑래,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6] 석상훈, 김헌수,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5권, 제3호, pp.99-124, 2012.

[7] 성지미, 안주엽,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1호, pp.39-74, 2006.

[8] 송일호, 박명호,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pp.7-26, 2012.

[9] 신현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주요 일자리 특성," 노동리뷰, 제45권, pp.62-77, 2008.

[10] 안주엽,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산업관계연구, 제24권, 제1호, pp.87-108, 2014.

[11] 원시연,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제1040호, 2015.

[12]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13] 유태균, 강성민, 정찬미, "중고령자의 자산빈곤 특성 및 자산빈곤이행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4호, pp.37-54, 2014.

[14] 이규용, *고령화 및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15] 이기주, 석재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pp.55-88, 2011.

[16] 이성균, "중장년층의 취업과'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제15권, 제2호, pp.181-216, 2009.

[17] 이순아,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간 비교," 연금포럼, pp.38-47, 2015.

[18] 이승렬, 최강식,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4호, pp.83-103, 2007.

[19] 이시균, 이주현, "고용안정성에 관한 특성 분석," 고용이슈, 제2권, pp.112-127, 2008.

[20]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1, 2013.

[21] 이채식, 김명식, "중고령 장애인의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제반 특성비교를 통한 취업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3호, pp.5-34, 2014.

[22]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2014.

[23] 장인성,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인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처, 2012.

[24] 전병유, *경제위기 전후 고용안정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2.

[25] 전용일, 임병인, 박소은,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

는 *영향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2013.
[26] 정경희,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7] 정진호,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노동연구원, 2011.
[28] 지은정,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pp.233-259, 2012.
[29] 최숙희, 강우란, *중고령자의 근로관에 관한 국제비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8.
[30] 최옥금,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1호, pp.5-25, 2007.
[31] 통계청 보도자료,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2015.
[32] 홍석태, 양해술,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pp.287-299, 2008.
[33] M. Baker, J. Gruber, and K. Milligan, "Income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in Canada," In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Micro-estim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99-152, 2004.
[34] B. Berkel and A. Börsch-Supan, "Pension reform in Germany: The impact on retirement decisions," Public Finance Analysis, Vol.60, No.3, pp.393-421, 2004.
[35] World Health Organization,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WHO, 2002.
[36] http://pmoblog.tistory.com/791
[3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9/0200000000AKR20151019173100017.HTML
[38] http://kosis.kr
[3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31790

저 자 소 개

강 성 호(Sung-Ho Kang) 정회원

- 1994년 2월 :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제학사)
- 1998년 2월 :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6년 8월 :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관심분야> : 공사적연금, 빈곤, 노후소득보장

조 준 용(Joon-Yong Jo) 종신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12월 : U.C. Berkeley(사회복지학과)(Ph.D)
- 2008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빈곤과 자활, 사회정책이론, 국제사회복지